

#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아주대학교

김용진

---

\*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학회, KDI, 그리고 후원해 주신 자유창의교육원과 국민은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One of my students wrote on a recent exam, **"I took two economics classes before yours, and I had a hard time find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of economics, firms and the entire society."**

Given that the overall objective of economics is the study of the economy (isn't it?) and given that the economy is comprised of firms and individuals, isn't this a damning criticism? If this was an isolated comment, I could cavalierly dismiss it, **but I hear it time and time again.**

**My heart stops when students tell me that they were excited to begin their study of economics only to be turned off by an onslaught of deductive logic and abstract models with little resemblance to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Indeed, "in the business, government and other non-academic communities, the perception is widespread and growing of economics as a technical and rarefied discipline, of questionable relevance and limited practical use" (Hodgson 2001, p. 9).

(in pp.4-5 of Reardon[2013])

**“경제는 애들도 기피하지만 솔직히 교사들도 다들 가르치기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경제 교과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목만 7년째 가르치고 있다는 노모(31·여)교사. 그는 경제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조차 사회과에서 제일 가르치기 기피하는 과목이라 자조하면서도 경제·금융 맹인 양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고정관념이 ‘경제과목 기피’ 현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 분석했다. 노씨는 이론위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적시된 생활밀착형 교재가 나와야만 할 때라 강조했다. 동시에 경제·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모하는 만큼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기회도 풍부하게 제공되길 바란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능 응시생 총 58만5532명 중에서 경제 과목을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은 7304명에 불과하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을 필수적으로 봐야만 하는 응시자 총 32만 2674명 중 단 2.26%만이 경제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경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학교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적어 전체(2303개)의 15%(348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일보 [이슈탐색] 홀로 왕따 당하는 경제교과서...미움받는 이유는? 2016-10-01 06:00).

Of course, economics is in many ways a science, and the work of our scholars and their computer models really does matter. But, as the economist Edwin R. A. Seligman put it in 1889, **“Economics is a social science, i.e., it is an ethical and therefore an historical science....It is not a natural science, and therefore not an exact or purely abstract science.”**

To me, and no doubt to the other panelists, part of the process of pursuing the inexact aspects of economics is speaking honestly to the broader public, looking them in the eye, learning from them, reading the emails they send, and then searching one's soul to decide whether one's favored theory is really close to the truth.

**[Robert J. Shiller] A people's economics in pursuit of human element, 2011-01-26**

## **목차**

### **I. 경제학,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문제**

1.1. Problem of Economics as a Discipline

1.2.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의 실패

1.3. 소득분배와 실업 문제

### **II.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2.1. 한국적 경제학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한 문제

2.1.1. 과도한 수학 의존성

2.1.2. 상이한 패러다임

2.1.3.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

2.1.4. 인센티브 구조

2.2.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안

2.2.1.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방향

2.2.2.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방안

### **III. 우리나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주요 경제적 문제들**

## **VI. 결론**



# I. 경제학,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문제

## 1.1. Problem of Economics as a Discipline

-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economics students and faculty are less altruistic than others. In one example, economics students expressed a lower willingness to contribute money to pay for public goods than other students.** The same was found of economics faculty, in spite of their average pay being higher than the faculty in the other disciplines to which they were compared. (Bauman, Yoram, and Elaina Rose, 2011.)

- Similarly, "... (note researchers who undertook a number of free rider/prisoner's dilemma games, found **students with a training in economics to be more aggressive, less cooperative, more pessimistic about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and more prone to cheating than students who had not undertaken any economics subjects** that selection bias was controlled for in these experiments). The characteristics that developed as a result of taking these economics courses persisted long after their education had finished." (Frank, Gilovich & Regan 1993, 1996, cited in Thornton, 2013)

(The human element in the new economics: a 60-year refresh for economic thinking and teaching , Neva Goodwin [Tufts, USA]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68)

- We present three studies using multiple methods to assess the effects of economics education on greed.
  - Study 1 shows that **economics majors and students who had taken multiple economics courses kept more money in Dictator Games.**
  - Study 2 shows that **economics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greed and towards one's own greedy behavior.**
  - Study 3 shows that **a short statement on the benefits of self-interest could bolster greed's moral acceptability.**

(ECONOMICS EDUCATION AND GREED by Long Wang, Deepak Malhotra, and J. Keith Murnighan)

- Economic behavior is influenced by technologies and cultures, which evolve in ways that are certainly not random but which cannot be described fully, or perhaps at all, by the variables and equations with which economists are familiar. Models, when employed, would therefore be context specific (John Kay, 2013).

- Anthropologist Tim Kasser, economist Robert Frank, and others working in the area of hedonic psychology show **happiness and mental health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rongly materialistic goals, especially when the goals are set in relation to others' achievement** (i.e. the goal is to have something more or better than ones reference group).

(The human element in the new economics: a 60-year refresh for economic thinking and teaching , Neva Goodwin [Tufts, USA]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68)

– The problem with neoclassical pedagogy is threefold:

**--First, a disconnect between what is taught as subject matter and how the world works.**

**--Second, the wilful ignorance of the social sciences and the physical sciences, particularly physics and mathematics.**

**--Third, neoclassical pedagogy is anti-pluralist.**

Instead of enabling students to grasp the complexity of our problems with a multi-faceted emphasis on differ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neoclassical economists train students to think like economists – as if all economists think alike – and that only one perspective exists, while denying the legitimacy of all others.

( “A radical reformation of economics education: educating real world economists” by Jack Reardon)

## [ 매경의 창] 기업 없는 경제학의 비극

경제학에서 `경제성장론`은 가르치는데 기업성장론`은 전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대신 경영대학에서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제학과는 그냥 `학과`로 남아 있다. 반면 기업을 가르치는 경영대는 `비즈니스스쿨`로 확대되어 있다.

기업 내 부문인 전략, 회계, 재무, 인사 등이 경제학과에 버금가는 개별 학과가 되어 있다. 교수들의 연봉도 경제학과보다 경영대가 높은 곳이 많다. 필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물만 봐도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경제학과 건물은 이코노미 클래스이지만 경영대 건물은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기업은 없고 시장만 있다. 그리고 '시장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균형 상태는 혁신이 없는 상태이다. 야심적인 혁신가들은 '초과이윤'을 달성하기 위해 균형을 깨면서 새로운 일을 벌인다.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이들은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런 사고 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기업이 새롭게 하려는 일들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기업이 혁신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대학들이 학교순위 경쟁에 급급하면서 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전문 분야 학술지에 낸 논문으로만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숨페터도 없고 펜로스도 없는 좁은 영역에서 수많은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기 위해 경쟁한다. 입시성적 잘 받기 위해 매달리는 고등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학술연구에 그렇게 많은 공공자금이 지원되는데도 "쓸 만한 연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없는 경제학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

(신장섭, 매경 2016 년 9 월 23 일)

## 1.2.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의 실패

- 우리 나라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인식,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학문적 프로세스의 문제: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한국 경제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중요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
- 한국의 중요한 경제 문제들 (저출산고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원화된 산업구조, 시장과 괴리된 임금구조, 통일안보, 외교통상...)각각에 대해 장기간 연구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자를 배양할 수 있는 자생적 연구 생태계의 확보가 필요.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치 행정 프로세스의 문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논란이 뜨겁다...최근 한 계약직 직원의 자살로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했던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유통점 강제 휴무제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참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하는 무상보육비가 과거 8년 동안 100조를 부었으나 합계출산율은 1.17%이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여성노동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음.)

결론적으로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 이익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아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예측, 사후 영향평가 없이 정책당국이 국민경제를 놓고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

최근 행정부에 비해 의회 권력이 크게 강화되어 있고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의 유혹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책당국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능력이 없이 정치권과 이익단체와 같은 수준이라면 국민경제를 놓고 얼마나 더 위험한 도박을 할지, 이런 공무원들과 정책연구소에 왜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기고/이병태]과학적 분석없이 도박으로 전락한 경제정책들

### 1.3. 소득분배와 실업 문제

〈표 1〉 상위 10%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연도	1995년	2000년	2008년	2012년	증감(%p) (1995~2012년)	증감률(%) (1995~2012년)
미국	40.5%	43.1%	46.0%	47.8%	7.3%p	18.0%
한국	29.2%	35.8%	43.4%	44.9%	15.7%p	53.8%
싱가포르	30.2%	38.1%	43.6%	41.9%	11.7%p	38.7%
일본	34.0%	37.2%	40.9%	40.5%	6.5%p	19.1%
영국	38.5%	41.0%	42.0%	39.1%	0.6%p	1.6%
프랑스	32.4%	33.1%	32.6%	32.3%	Δ0.1%p	Δ0.3%
뉴질랜드	32.6%	31.2%	30.0%	31.8%	Δ0.8%p	Δ2.5%
호주	29.1%	31.3%	29.3%	31.0%	1.9%p	6.5%
말레이시아	27.0%	22.5%	24.9%	22.3%	Δ4.7%p	Δ17.4%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http://g-mond.pari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나눠 가지는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What is good for people, Marshall felt, is to want the kind of reward that a good person wants: i.e., distinction, honor, and the pleasure, for its own sake, of serving others. If the moral structure of society and of its individual participants can gradually be brought to this orientation the whole society will be better off, for **honor could partially replace pay as the reward at the higher levels of work effort, permitting an even distribution of income without loss of produ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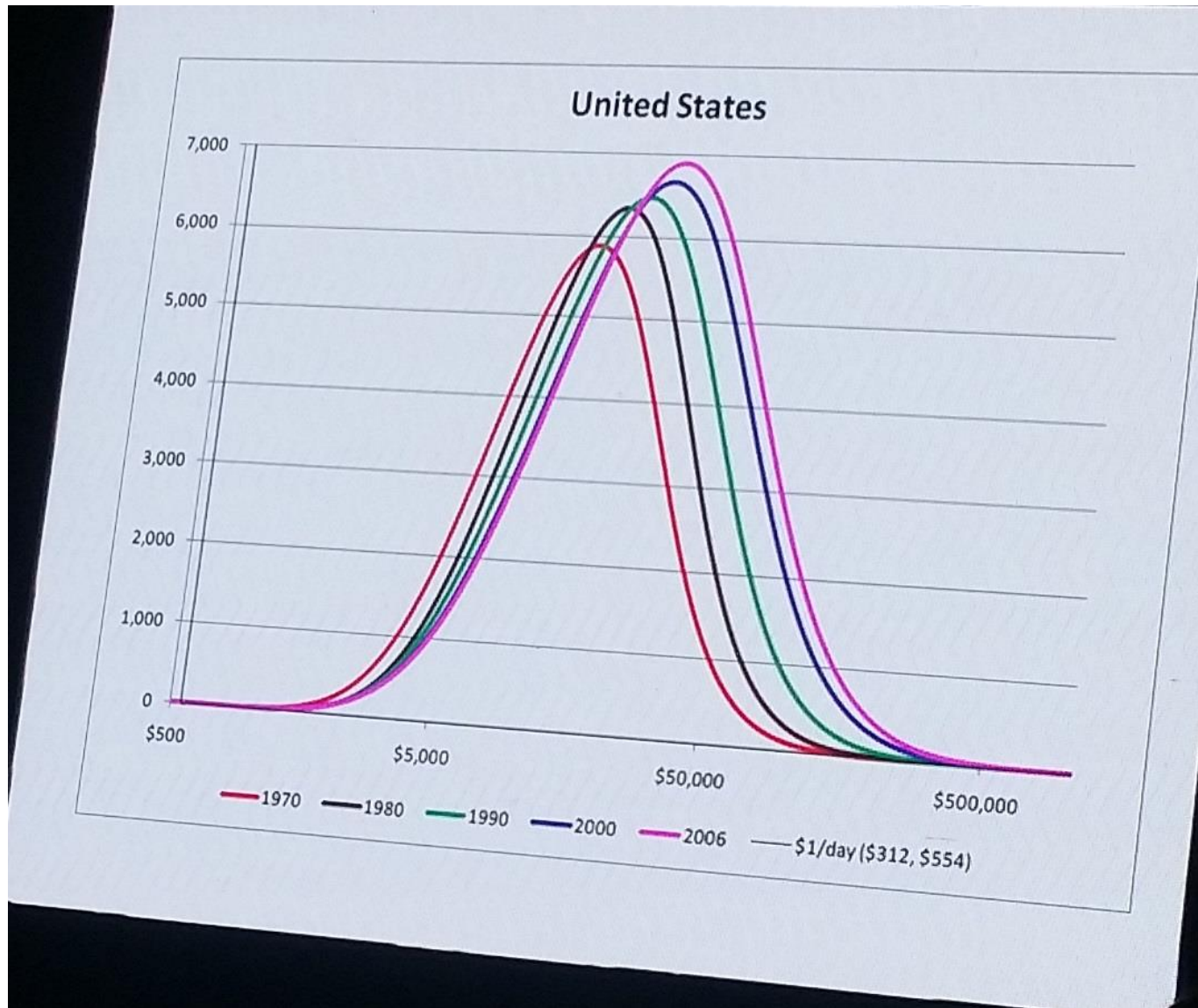
(Marshall [1907] is cited in Neva Goodwi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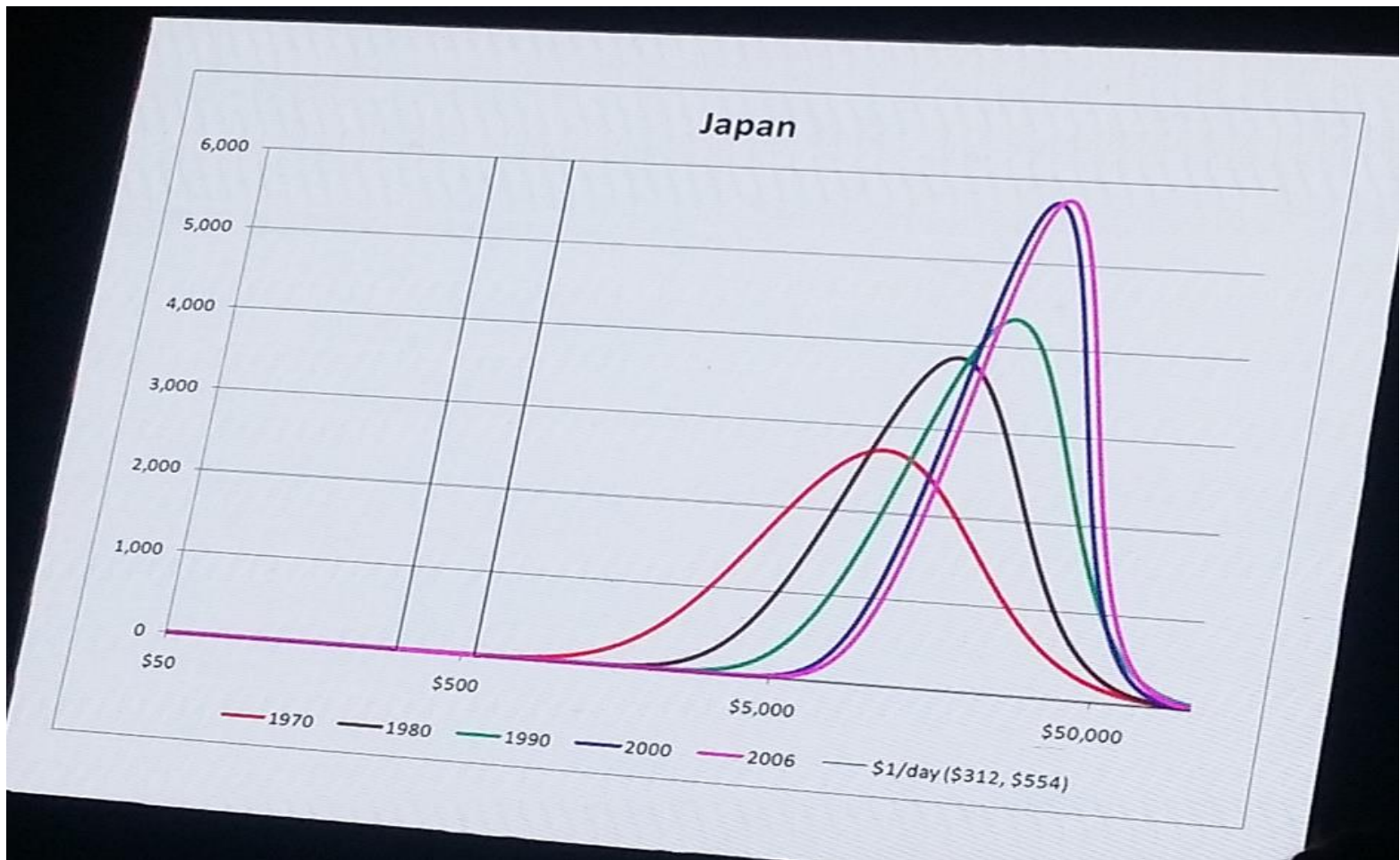
Alfred Marshall, 1907, "The social possibilities of economic chivalry"

- 적절한 임금 구조, 그리고 부동산 렌트에 대한 적절한 누진 세제.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부자 (대기업)들의 부의 증식의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 수익임.
- 청년실업은 일자리 보다는 LBD (총인적자본의 반을 차지 함)의 학습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중요.
- 대기업이 청년들의 LBD 학습기회 제공에 앞장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
- 특히 대기업들이 고용과 노동 전체에 대한 소득 배분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야 함.
- 소득 분배를 보여주는 다른 방법 (Lucas 교수님의 베이징포럼과 북경대 세미나): 자료, 자료,



● 자료...





What makes Japan so equitable society?

자산가격이 폭락하여 자산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높은 수준 (70% 대)에 있으며, 노동소득 내에서의 분배가  
양호하여 전체적 소득분배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II.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제도 등에 따라 각 나라의 사회과학은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적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 2.1. 한국적 경제학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한 문제

### 2.1.1. 과도한 수학 의존성

- Krugman, Shiller, Piketty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학이 수학에 너무 의존한다는 주류경제학의 문제이다.
  - 특히 2007, 2008 의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에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 너무 추상적인 가정 하에서 수학 문제만 풀다 보면 현실의 중요한 사실을 연구하기 보다는 문제풀이에 급급할 수 있어,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게 가정된 가설 때문에 공허한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e.g., 서베이로는 이왕휘[2014], 철학적 논의로는 이상욱[2014] 참조)

- **To put it bluntly, the discipline of economics has yet to get over its childish passion for mathematics and for purely theoretical and often highly ideological speculation, at the expense of historical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social sciences.**
- **We must start with fundamental questions and try to answer them.** Disciplinary disputes and turf wars are of little or no importance. In my mind, this book is as much a work of history as of economics.

(p.29 in Piketty[2014])

For most undergraduates, the mathematics used in cutting-edge modern economics research is the equivalent of Greek, and thus, the textbook authors have been, understandably, slow to incorporate the changes. The economic approach in the micro textbooks in large part still reflects the research approach to economics that economists followed in the 1930s to 1960s. In fac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textbooks still reflects the structure that was developed in the 1950s with Paul Samuelson's textbook (Samuelson 1948).

**With the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gulf between the research that economists do and the training in mathematics that undergraduates have growing ever wider,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to relate what economists do to what they teach. (in P. 252 of Colander[2005])**

- To be useful, economists must above all learn to be more pragmatic in their methodological choices, to **make use of whatever tools are available, and thus to work more closely with other social science disciplines.**

(.p.400, Piketty)

- Economists presented as reality an idealised vision of free markets, **dressed up in fancy math that gave it a false appearance of rigor.** (Paul Krugman, Oct 6, 2014, INYT, "The Dismal science: Seven bad ideas.")



- Critics of "economic sciences" sometimes refer to the development of a "pseudoscience" of economics, arguing that it uses the trappings of science, like dense mathematics, but only for show. For example, in his 2004 book Fooled by Randomness, [Nassim Nicholas Taleb](#) said of economic sciences: **"You can disguise charlatanism under the weight of equations, and nobody can catch you sinc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controlled experiment."**

- **"My belief is that economics is somewhat more vulnerable than the physical sciences to models whose validity will never be clear, because the necessity for approximation is much stronger than in the physical sciences, especially given that the models describe people rather than magnetic resonances or fundamental particles.** People can just change their minds and behave completely differently. They even have neuroses and identity problems, complex phenomena that the field of behavioral economics is finding relevant to understanding economic outcomes. But all the mathematics in economics is not, as Taleb suggests, charlatanism.

- Economics has an important quantitative side, which cannot be escaped. The challenge has been to **combine its mathematical insights with the kinds of adjustments that are needed to make its models fit the economy's irreducibly human element.**" (Shiller, 2013 "Is Economics a Science?", [Project Syndicate economists](#), Wednesday 6 November 2013.)

## 2.1.2. 상이한 패러다임

-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류경제학의 흐름이 Fresh Water and Salt Water Economics 사이에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해왔으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한국적 경제 현실에 적합한 이론적 스펙트럼에 대하여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 위치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 (Two overlapping yet distinct views of pluralism vie for the allegiance of economics educators: **an 'intellectual diversity' view in which the pluralist goal is to integrate competing paradigms into standard curricula, and a 'critical thinking' view in which the aim is to cultivate students' ability to reach reasoned conclusions in the face of analytical, empirical or normative uncertainties.** This paper defends the latter view. Educators who aspire to achieve and expand the pluralistic outcomes specified in the QAA Economics Benchmarking Statement would be better served **by pursuing the student-centred aim of intellectual freedom rather than the teacher-centred aim of paradigmatic diversity.**

(p.58 of "Rethinking The Pluralist Agenda In Economics Education" by *Robert F. Garnett, Jr.[2009]*)

- 주류 패러다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고 틀 속에서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상보적 관점이 필요.
- 기존의 주류 패러다임의 형성은 관련된 적절한 회원들의 동의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결정되며,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더 낫다는 보장이 없음.
- 또한 주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류 패러다임의 고착화(Lock-in) 효과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

### 2.1.3.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

-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선 한국 경제 현상에서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이해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학제적 시각에서 locally approximated 된 이론적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한 사회에 대한 이론은 그 사회의 독특한 현실적인 경험과 역사에 의해서 규정 또는 한계가 설정됨. 왜냐면 특히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universal law 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local approximation 이기 때문.

- 또한 이러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수학적 언어에 기반한 엄밀한 연역적  
글쓰기 외에도 인류학이나 역사학처럼 약간은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글쓰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어야 함.



서구사회에서 빌려온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의  
식민성이라는 차원이다. 서구의 이론과 개념 없이 비서구  
사회에서 사회과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지식생산의 식민성을 넘어서기 위해...어떻게 역사적 궤적이  
다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론(대부분이  
서구로부터 이전된 이론들)을 다시 설정하거나 변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강명구와 이상규 [2011])

식민화된 지식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사회와 사람들의 현실을 관찰,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연구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연구대상과 완전히 유리돼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보기에 질문은 어떤 형식의 글쓰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제기돼야 한다. 형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글쓰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형식을 통해 구체화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논문을 써야 한다.

(주형일[2011])

## 2.1.4. 인센티브

-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에 대해 제도적으로 설정된 편향된 인센티브 문제가 존재.
  -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학교 당국들이 학문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SSCI 등재지에 게재되면 높은 평점과 연봉을 주게 되고 이에 의해서 한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보다는 미국문제를 풀기에 바쁘다는 것임.

그리고 신규 채용된 교수와 그들의 연구 경향성이 SSCI 를 중심으로 한 교수평가 및 채용 시스템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논문의 편수나 영향력 지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현행 SSCI 중심의 교수평가 정책을 멈출 것을 주장하고, 언론학계 전반에서 어떤 교수와 학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언론학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강명구[2014])

## 2.2. 한국적 경제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안

### 2.2.1. 방향

- 해결 방향 설정을 '한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에 두면 위에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임.

--"Finally there is the quality that existed in Adam Smith and Alfred Marshall – and, indeed, in Paul Samuelson and in most of the other great economists: **That is the quality of wishing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Many students come to economics because they have this wish, but those who are most concerned with it are the ones who, in recent decades, have been turned off and dropped out of the field, **disgusted with the lack of overt values of caring and community, and the presence of implicit values of greed and selfishness.**" (pp. 116-117 of Goodwin [2014])

- 또한 사회현상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설명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여러 패러다임 또는 사회과학의 여러 다른 분야들의 상보적인 접근에 의해서 큰 그림의 이해가 가능.
- Rodrick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과학 여러 분야의 이론 및 방법론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연구자가 'craft' (사회과학자의 완숙한 연구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skill)를 가지고 연구 대상 실증적 사실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융합하여 연구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한국적 경제학'이란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에 있어 중요한 경제 현실 문제를 논평자나 조언자의 입장이 아니라, 민주적 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 (democratic deliberation, debat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용하며 유연한 사고 틀과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학을 의미.

### 2.2.2.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방안

- 한국은 그 동안 매우 우수한 경제학자를 육성하고 배출하였으나, 당면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하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물론 그 동안 우리나라가 배출한 상당 수의 경제학자들이 미국 또는 선진 여러 나라들의 우수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며 저명한 SSCI 등재 학술잡지 등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경제 학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음.



- 그러나, 한국사회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한국에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함.
- '한국적 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경제학자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국의 고유한 또는 미국과 다른 경제 문제들이 존재함.

- 이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현실참여적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음.
- 무책임한 방관자 입장에서 무책임한 논평이나 비현실적인 논리적 게임을 하기에는 귀중한 인적자본의 기회비용 손실이 크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여러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실증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다.

(2) 또한 이렇게 파악된 실증적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이론을 한국적 맥락으로 재해석하고 적절하게 변형된 이론이 필요하다.

- 경기변동 이론에 있어 한국의 거시 자료에 있어서 특히 1997년 이 후에 소비의 변동성이 소득의 변동성보다 커서 선진국의 자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 이는 이론적으로 도출되어 있고 선진국의 자료로 실증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소비균등화 이론에 배치됨. 이는 오래된 risk premium puzzle 처럼 한국의 거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 (이우헌 [2016], Garcia-Cicco Pancrazi, and Uribe [2010] 등 참조).

(3) 또한 이를 위해서는 철학 역사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경영학 등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며,

(4) 방법론도 수학적 모형 뿐만 아니라 장단기 자료에  
의한 사례 실증 연구도 필요하며, 역사적 관점에서의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

(5)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또는 내부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여러 상황 하에서의 시나리오가 확립되고 각  
시나리오에 있어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최적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6) 이러한 한국 고유의 중요한 문제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후진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연구소 등의 자생적 생태계가 필요하다.

### III. 우리나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주요 경제적 문제

한국이 당면한 주요 여러 경제 현안과 그 각각에 대한 한국적 경제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문제의 대다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당면할 문제이며, 따라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지식의 한계적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경제학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한국 경제학자의 연구 인센티브 문제

---SSCI 등의 강조에 의해서 능력있는 경제학자는 (특히 거시 경제 분야에 있어) 미국문제를 풀고 있음.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는 역설적으로 미국문제를 푸는데 한국 돈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구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 있어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의 관련성에도 평가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모든 대학에 있어 교수 평가가 연구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문인 경제학에 있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



## (2) 통일문제;

---정치 사회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류 경제학 방법론에 의한 모형에 의한 설명과 대안 필요 (e.g., 한순구[2014], 조동호와 박지연[2014]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함의를 도출).

---이 통일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정치경제의 이해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 기반한 외교전략이 중요함.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고 전망하고 선제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함. 좁게는 미래의 산업구조,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통일비용의 산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 임 특히 국제간 정치 군사 경제적 역학이 중요하므로 국제정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e.g.,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통일비용의 이론적 시뮬레이션과 계산은 송준혁[2014] 참조)

(3) 군사 안보 외교 문제;

---미국에 군사력의 의존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가?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력 투자도 공장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투자임.

(e.g., 이론모형으로 Kim and Grossman [1995] 참조.)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25%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어 정치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추세 (Fusion economy).

---미국과 중국과의 hegemony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한국의 군사 외교정책의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술은 무엇인가?

---경제학의 게임이론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에 관련된 역사적 통찰이 필요. 이 외교문제는 남북 문제의 국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

---이러한 장기적인 외교 군사 그리고 산업구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5) 국제적 정세의 변화에 의한 한국의 정치 외교 군사의  
입지 변화: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의존도도 증가시킴.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 및 외교  
관계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  
군사 외교 전략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6) 수출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개방은 필수.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는? 재벌의  
규모경제와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은 어떻게?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개방 전략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조직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연구 방식과  
달라야 함. 미국 경제를 수 많은 중소기업이 이끌어 가므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한국의 수출은 5 개 품목이  
한국의 총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이 중 각 품목은 2-3 개의  
대기업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사례 심층 연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보다 더 적절할 수 있음.

(7)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

---막대한 자금을 육아 보육 등 출산장려 정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구감소는 주어진 것으로 하고, 대신 교육과 의료보건과 노년, 여성 및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인가?

(e.g., 고령화의 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이론연구로는 김용진과 이철인[2013],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홍석철과 김한경[2013] 참조)

---여러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와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 등을 통하여 실증 분석과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증가와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의 축적간의 관계에 대하여 장기 자료를 구하여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에 적합한 복지 모형;

---한국에 맞는 재원 조달 방식과 복지 연금제도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

---북구 영미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 들은 각기 다른 복지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형들도 계속 진화 중.

---한국의 최적 모형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친다 해도 이러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사고의 틀이 필요.



(9) 복지국가 진입에 따른 산업구조와 소유구조의 변화;

---큰 방향은 교육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이 재정의 50%가 넘는 social state 로 변화할 것임.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걸쳐있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적의 지배구조의 design 이 필요.

(e.g.,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는 강종구와 김영준[2013]를 참조)

(10) 저성장 시대에 있어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

---우선 저성장과 행복은 Piketty 관점에서 보면 상호배타적으로 작용. 저성장-저물가의 뉴노말 시대에 있어 Piketty 에 의하면 저성장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분배가 나빠진다는 것이며, 분배가 나빠지면 나라 전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하락하게 됨.

---특히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등에서의 정치경제 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부와 소득 분배의 논쟁이 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Piketty 의 주장대로 이 중요한 논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democratic debate 와 deliberation 을 위해서도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한국경제에 있어 가능한 긴 기간의 부와 소득 분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민주적 논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e.g., 비록 짧은 기간의 소득 자료 만에 국한된 것이지만 김낙년과 김종일[2013]의 자료와 연구 참조.)

## VI.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결론

### 문제 1:

- 학생들이 배우는 이론이 일상에서 접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때에는, 이 이론이 다루는 경제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려는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과 연구 역량이 떨어진다.

### 문제 2:

- 대중매체나 SNS 등에 오르내리는 한국의 주요 경제 문제들은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교과서나 연구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교육과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 해결 방향 1:

- pluralism 과 critical thinking 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다.

--그러나 여러 다른 paradigm 들에는 서로 incommensurabilty 라는 문제가 존재하여 융합이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교육에 있어 교육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분적 방안은 대학생들은 대학 1-2 학년 때에 철학, 과학철학, 역사, 사상사, 제도론,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학습하여 폭 넓은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Two overlapping yet distinct views of pluralism vie for the allegiance of economics educators: an 'intellectual diversity' view in which the pluralist goal is to integrate competing paradigms into standard curricula, and a **'critical thinking' view in which the aim is to cultivate students' ability to reach reasoned conclusions in the face of analytical, empirical or normative uncertainties**

This paper defends the latter view. Educators who aspire to achieve and expand the pluralistic outcomes specified in the QAA Economics Benchmarking Statement would be better served by **pursuing the student-centred aim of intellectual freedom rather than the teacher-centred aim of paradigmatic diversity.** (in p.58 of Garnett[2009])

## 해결 방향 2:

- 한국적 경제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연구와 교육의 자생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자생적 생태계가 존재해야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투자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자나 학습자로서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가슴의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The End

감사합니다.